

야권 '민생 추경·日 오염수·노란봉투법' 쟁점 현안 공조

민주·정의당 '2+2 회동' 민주 추경안 35조·정의당 10조원 제시 이태원참사특별법 후속 조치·'핵 오염수 투기 반대 모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워니 국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민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정책 협의를 통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은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 가운데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찾아보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서는 양당 정책

위원회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약 35조원, 정의당은 약 10조원을 제시한 상태다.

정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구체적 추경 액수는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생각하는 (액수)보다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당은 오는 10일께 열릴 7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도 약속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서도 '연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원내수석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자는 우리 당 제안을 박광온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도 "일본의 원전반대 의원모임과 연대하고 국제적 제안도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라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다"라며 "국회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결국 핵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 이정미 대표의 제안대로 '평화안전 탱크'로 핵 오염수를 육상 처리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제사회 기금 지원을 말씀했다"며 "평화안전 탱크 설치 비용은 30년간 4000억~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충분히 국제사회가 재정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권 '쟁점 현안' 연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민주 광주 국회의원 시의회서 회견 “균형발전 핵심 모델”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3일 반도체 특화단지와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수도권에만 쏠려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이병훈 광주시장위원장을 비롯해 해운영덕, 송갑석,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김경만(비례)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대상 부지 확보로 신속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동연구소 선정으로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방시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가장 성공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차로의 전환이 국가차원의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부비전인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強)' 진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부장 특화단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센서에 최적화된 자율주행차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협력생태계가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는 광주가 국내 최적의 장소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논할 수 없다”면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항만에 드론 금지 구역 지정·불법 드론 퇴치

윤재갑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은 3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에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은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최근 3년간, 4대 항만

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격추·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시아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 이달 중순 마무리 돼야”

정개특위 '2+2' 협의체 발족

여야는 3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정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현행 선거구 제도에 대해 “어떤 정당이라도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확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의 정도 기간 앞뒤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확정이었다는 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이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선거제도의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2 협의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